



## 세계 노사정 소식

### 미국

#### 미국 : 백악관, 구직자 지원 기획안 발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직업배치 프로그램을 통합한 새로운 구직자 훈련 프로그램이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획안은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와 여타의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의 실직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안이 될 것이다.

통합 실직자 프로그램은 최대 1백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디렉터인 Gene B. Sperling이 월요일에 열린 기획안 회의에서 말했다.

지원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일년에 4,000달러(한화 약 465만 원)를 새로운 산업의 기술

습득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당국에 따르면 약 15만 명의 근로자들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하에서 직업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지원프로그램의 개선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오바마 정부의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금의 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28억 달러(한화 약 3조 2,521억 원)의 예산을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에 10년에 걸쳐 사용하게 된다.

Sperling에 따르면 새로운 지원안은 실직자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간 경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5천만 달러(한화 약 581억 원)를 인터넷 접속을 포함해 고용센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사용하는 안을 포함한다.

• 출처: 뉴욕타임즈, 2012년 3월 13일자, 'White House Outlines Plan to Help With Job Search'



유럽

스웨덴 : 스웨덴 북부 키루나, 광산업 부흥으로 공학기사와 지질전문가 채용 필요성 증대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광산도시 키루나에 최근 광산업이 새로이 확장되고 있다. 키루나에 위치한 스웨덴 광산업의 주자인 LKAB는 수출 면에서 볼 때 스웨덴에서 여덟 번째로 큰 광산회사로 유럽 원광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내에서는 대규모인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광산업계의 주요 주자는 아니다. 사실 LKAB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광산회사에 비해 키루나에 소재한 원광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LKAB는 현재 3개의 광산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광산 위에 2개의 광로를 새롭게 건설하고 연구센터도 확장하며 또한 주변 기반시설도 확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4,000명인 직원 수를 향후 몇 년간 약 1,000명 정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웨덴 국영직업알선소는 LKAB와 협력

해 인원 채용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 양일 동안 다른 국가에서 이주한 이민자들 중 공학기사와 지질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 상담을 실시하였다. LKAB는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증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LKAB의 확장으로 인해 공학기사와 지질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 및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증가해 의사, 치과의사, 기타 기술자, 경리직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 출처: 스웨덴 공공직업알선소 홈페이지, 2012년 3월 12일자, Pressmedelände, 'Arbetsförmedlingen och LKAB flyger ingenjörer och geologer till Kiruna'

스웨덴 : 2012년 2월 노동시장 현황

2011년 말 발표된 노동시장 전망에서 2012년 들어 노동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약세는 2012년 2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노동시장의 확장세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국영직업알선소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실업자 간의 매칭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012년 말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실업자 수, 즉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자는 40만 4,0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는 스웨덴에서 등록된 전체 노동인구의 8.7%에 달한다.

전체 등록 실업자 40만 4,000명 중 22만 명은 완전실업자이며, 나머지 18만 5,000명은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밝혀졌다. 이를 비율로 말하면 각각 4.7%와 4.0%이다. 국영직업알선소에 신규로 등록된 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2월 현재 2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2월 중 국영직업알선소에 사업자가 구인 등록한 수치는 74,000명으로, 이는 지난 해 동월과 비교할 때 약 1,000명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구인 등록 수의 증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인 수치가 높은 분야는 식당업 등의 서비스업종인 반면 제조업과 운수업 분야에서 구인 수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2년 2월, 다가오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정규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및 한시적인 하계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 및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인력에 대한 구인 수치는 15,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2월에 비해 약 1,000명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2월 중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한 실업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2월에 비해 5천 명 감소한 수치이다.

- 출처: 스웨덴 공공직업알선소 홈페이지, 2012년 3월 14일자, Pressmedelande, 'Fler arbetslösa än förra året'

## 영국 : 경찰의 응급전화 응대 직원 5,261명 일자리 상실

2011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43개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5,261명의 최초 응대 요원(first responder officer)이 해고되었다고 발표한 정부의 안에 대해 영국 노동당이 “충격적”이라며 비난하였다. 경찰사찰단(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은 최초 응대 요원을 999 응급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최초로 응답하는 직원,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웨일즈는 앞으로 5년간 20% 정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사찰단은 2015년까지 2010년보다 16,000명 정도 더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일선근무자(front-line officer)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부 장관(policing minister)인 닉 허버트는 최초 응대 요원이 교통사고나 범죄의 긴급 전화를 받고 대처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인원 감축의 이유가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 범



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의 삭감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노동당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노동당 또한 정부의 예산 감축에 동의하였고 경찰 인력이 적은 수로 운영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선 근무 인력을 보호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이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무 장관인 테레사 메이도 사설 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를 맡김으로써 전방 근무 인력을 보호할 수 있다며 백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야당 내무 장관인 이벳 쿠퍼는 이 주장이 “허위”라며 정부가 경찰 내부의 999 긴급요원 수를 줄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였다. 쿠퍼는 최근 999 전화응대 요원의 급작스런 감축은 정부가 16,000명을 해고함으로써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하고 경찰 지원금 20% 삭감으로 인해 일선 근무자들이 타격받는 것을 막아

야 한다며, 경찰 인력을 줄이면 결국에 그 피해는 지역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데본(Devon)과 콘월(Cornwall) 지역의 근무자들이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540명의 최초 응대 요원(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이 해고되었다.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에서도 1,023명이 해고되었는데, 이는 19%에 해당한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발표된 수치가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3개의 경찰서 중 단지 23개만이 응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측은 이 수치가 2010년 3월 31일부터 2011년 말까지 측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 출처: 1. BBC, 2012년 3월 11일자, ‘Police cut 5,261 emergency 999 officers, say Labour’
- 2. 인디펜던트, 2012년 3월 11일자, ‘Labour attacks ‘shocking’ police cuts’

## 영국 : 정부, 공공부문 지역별 교섭 제안

오는 21일 발표될 영국 정부의 예산안에 ‘지역 임금교섭’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 단위 공공부문 임금교섭 구조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들의 더 낮은 임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해당 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을 결합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은 민간부문

의 임금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임금 관련 오스본 장관의 제안은 7월부터 우선 3개의 부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10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된 노동연금부와 내무부(2만 1천 명), 교통부(1만 6천 명)가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의 생활비나 민간부분 임금을 같은 지역적 요소(regional

factors)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서 고려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중앙교섭에 의해 공공부문 기관들이 지역시장 상황보다 2%에서 많게는 1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금 결정이 지역별로 이뤄진다면 수백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역에 걸쳐 보다 많이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과 거기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무부 관계자는 “제안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이라기보다 민간부문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친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지방정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3년째 동결된 가운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 및 교육부문 근로자와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개혁방안이 합의된 가운데 많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기여분을 내야 한다. 또한 이 제안은 재무장관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50%에서 40~45%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카뮌 존스 웨일즈 총리(first minister)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

자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영국 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재무장관 새미 윌슨도 공공부문에서 지역별 임금 차이를 두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인 PCS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연금은 줄이고 부자들 세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임금을 더 내리려는 이 계획은 근로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역효과를 낳는 방안”이라며 “보수당 지도의 개혁에 충분히 힘들었던 지역 경제는 이제 감축이 아니라 투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 UNISON도 “재무장관이 예산안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추동하길 원한다면 지역 단위 임금교섭은 그 길이 아니”라며 “지역 임금교섭은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빈곤 지역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UNISON은 “NHS에서 전국 단위 교섭구조(Agenda for Change)를 만들기 위해 4년이 걸렸고, 현재 성공적으로 동등한 임금과 동등한 수준의 훈련비용을 정착시켰다”며 “재무장관이 이 모두를 깨려고 한다면 우리는 병원들이 근로자 채용과 보유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장관은 아직 이 변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 짓지는 않았고, 이러한 변화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이 방안이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정책을 공공부문 전역에 걸쳐 확산하는 것이다.

• 출처: 1. BBC 온라인, 2012년 3월 17일자, 'Union

fury over public sector pay plans'

2. 피플매니지먼트 인터넛판, 2012년 3월 19일자, 'Budget to herald end to national pay bargaining'

### 영국 : 6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 있는 가정에 육아수당 지급 중단

영국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 대해 육아수당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년에 부모 중 한 명이 6만 파운드(한화 약 1억 1,2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해 육아수당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 5만 파운드(한화 약 9,333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현재 육아수당은 가구마다 첫째 자녀에 대해 1주일당 20.3파운드(한화 약 37,900원)가 지급되고 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13.4 파운드(한화 약 25,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육아수당을 청구하는 자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1주에 33.7파운드, 1년에 1752.4파운드(한화 약 327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수당은 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기본 세율의 납세자는 2190.5파운드(한화 약 409만 원), 고세율의 납세자는 2920.67파운드(한화 약 545만 원)의 가치가 있다. 원래의 개정안에서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42,475파운드(한화 약 7,928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을 중단하기로 계획하였다. 원래의 안에서는 부

모 중 한 명이 42,475파운드를 벌 경우에는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부모 둘 다 4만 파운드(한화 약 7,463만 원)를 번다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지적되는 문제는 육아수당수령의 경계가 되는 42,475파운드라는 액수이다.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42,476파운드를 받는다면 육아수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오스본이 발표한대로 새로운 개정안하에서는 육아수당은 5만 파운드(한화 약 9,329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 서서히 감액될 것이다. 이로써 42,475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서도 육아수당 수령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5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는 100파운드(한화 약 187,000원)마다 1%씩 육아수당은 삭감될 것이다. 즉 6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가구는 육아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원안대로라면 육아수당을 받는 780만 가구 중에서 120만 가구는 육아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이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을에는 5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3백만 명의 납세자에게 육

아수당이 신청 가능한 자녀가 있는지 묻는 우편이 발송될 것이다.

• 출처: BBC NEWS, 2012년 3월 21일자, 'Budget 2012: Child benefit cliff-edge tackled'

## 영국 : 근로자 3명 중 1명, 만성 수면부족

영국 근로자 3명 중 1명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근로자 7명 중 1명만이 “일어났을 때 상쾌하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컴퓨터 그리고 일감을 집에까지 가져 오는 행위 등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과 웰빙 전문기관인 Vielifie가 영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약 3만 9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수면에 관한 평가서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그들의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답했고, 8.4%는 “매우 불행하다”, 24.4%는 “불행하다”고 답했다. 기상한 뒤 30분을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오직 15.5%만이 상쾌하다고 했다. 3.3%는 탈진한 상태라고 말했고 24%는 상쾌하지 못하다, 57.2%는 약간 피곤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하루에 7~8시간 자야 한다고 말하는데, 응답자의 38.5%만이 7~8시간 잔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근로자 2명 중 1명(45%)은 수면시간이 5~7시간이라고 했고, 5.4%는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10%는 8~9시간, 1%는 9시간 넘게 잔다고 말했다. 수면의 질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33.8%가 가장 낮은 카테고리인 30점 이하에 포함됐다. 이는 이들이 현재 수면장에

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위험성이 큰 것임을 뜻한다. 보고서는 “영국 성인 노동인구 3명 중 1명이 수면문제를 갖고 있으며, 매우 많은 근로자들의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이 중 일부는 뇌가 잠이 부족한 것을 마치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 사용자들이 이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근로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거나, 책상에서 졸고, 집중력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바이러스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야간과 주말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불경기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침시간 직전까지도 일에 매달려야 하고, 그 결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양질의 수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주일에 5일 일하고, 밤에 7~8시간 잠을 자는 것이다.



한편 담배를 피우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일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알콜 섭취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자의 수면의 질(sleep score)이 52.7이었던 반면 비음주자는 48.5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우울증과

수면부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 출처: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2012년 4월 1일자, 'Chronic lack of sleep affects one in three British workers'

**프랑스 : 파리 디즈니랜드, 지난 20년 동안 5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오는 4월 12일은 파리 근교(마흔느 라 발레) 지역에 위치한 파리 디즈니랜드가 개장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지난 3월 14일, '유로 디즈니' 프로젝트 진흥청은 이 놀이공원의 지난 20년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디즈니랜드 발전 모델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여전히 프랑스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났다. 1992년 이래, 이들이 프랑스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370억 유로(한화 약 56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프랑스 전체 관광 수입의 6.2%에 해당한다.

지난 20년 동안, 이 놀이공원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성에는 2억 5천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는 1889년에 공개된 에펠탑(에 오르는 유료) 관광객 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지난 2011년에는 1,57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880만 명이 찾은 루브르박물관이나 710만 명이 찾은 에펠탑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놀이공원이 들어서기 전, 이곳에는 베트라브(홍무) 발 밖에 없었다. 20년 동안, 우리는 2만 9천여 명이 사는 거주지를 만들었고, 직간접적으로 5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에빠마흔느 총책임자, 뱅상 뷁케리 드 부와스항은 말했다.

방문객의 58%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영국인 27%, 네델란드인 14%, 독일인 13% 순으로 나타

**불만족스러운 근로자들**

현재 이 놀이공원은 약 1만 4,700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중 85~90%가량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디즈니랜드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유로디즈니 내 노동조합 CFDT\*의 대표자 자밀라 우아즈는 말한다. 또한 그녀는 “처음 고용 시, 우리는 순임금 1,100유로(한화 약 167만 원)

\* 프랑스 민주노동연맹. 프랑스에 존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 중 CGT(노동총연맹)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조합.

를 받는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상점의 판매원 및 종업원의 월급은 1,300유로(한화 약 197만 원)\*\*를 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결과적으로 공원 주변 지역 주거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월급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개장을 위해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출자한 6억 6,600만 유로(한화 약 1조 104억 원)는 거의 대부분 회수되었을 것으로 이 연구는 추정하고 있다. 그

간 이 놀이공원은 53억 3천만 유로(한화 약 8조 86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만들어냈지만, 5.5% 부가 가치세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유로디즈니가 지급한 금액은 8억 1,910만 유로(한화 약 1조 2,427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공원의 수입은 프랑스 국세청 창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송출된다.

• 출처: Le monde, 2012년 3월 15일자, 'Disneyland-Paris a créé 55000 emplois en France en vingt ans'

\*\* 2012년 1월 기준 프랑스 월 최저임금(임금총액)은 1398.37유로.

## 프랑스 : 경제위기 속 녹색 일자리의 증가?

2010년 프랑스 친환경 경제부문의 종사자가 45만 2,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GDD)'가 제시한 이 수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활동 영역을 친환경부문으로 전환한 기업이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활동의 증가가 반드시 신규 고용창출을 의미

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르넬환경\*이 예고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경우 현재부터 2020년까지 약 4,400억 유로(한화 약 676조 원)가 투입될 것이며, 약 60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산업 분야와 관련된 이 공사로 인해, 승계되거나 전환된 친환경 분야 종사자만큼이나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 그르넬환경(Grenelle environnement) - 2007년 사르코지 정부가 주도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포럼이다. 그해 9월과 10월, 6개 부문에 정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만들어냈으며, 입법이 되기도 했다. 그르넬은 에펠탑 근처 도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68혁명 직후 체결된 그르넬협약의 영향으로, '협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친환경사업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분야와 폐수정화 사업으로, 각각 9만 7,500명 정도와 9만 5천여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분야는 6만 2,500명 정도로 2009년에 비해 19%가 증가했으며, 생태농업 분야도 22% 증가하여 2만 2,50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녹색경제 분야는 프랑스 무역수지 균형의 역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사이 프랑스 무역수지 적자는 86억 유로(한화 약 13조 2,080억 원)가 늘어나 494

억 유로(한화 약 76조 원)에 달한 반면, 친환경 부문은 38%가 증가한 11억 유로(한화 약 1조 6,8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성과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비롯되었다고 위원회 부위원장 밝혔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3월 30일자, 'Progrès des emplois verts en France'
- 2. Le monde 인터넷판, 2012년 3월 29일자, 'La crise épargnerait-elle l'économie verte?'

### 프랑스 : 노동유연화, 존재감 없는 대선 공약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프랑스 주변 국가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보호 장치들이 예산 절감 수단과 맞물리면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 노동조합은 이를 유심히, 그리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비용 축소, 노동관련 규제 철폐 등 노동유연화의 흐름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 돌입한 프랑스에서 이 주제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3월 31일자) 기사\*는 프랑스를 위기에 처

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부인’ 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Medef 역시 이 비판과 입장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2007년에 비해 약해졌고, 지난 대선에서 주 35시간 근로제도의 포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 노동과 관련된 그의 주된 대선공약은 실업자 교육과 사회적 부가가치세이지만, 이는 노동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당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후보 역시 노동유연화 제안을 경계하고 있지만, 더 많은 규제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집단해고를 할 경우 그 해고비용을 올리는 것과 불안정 고용을 남용하

\* 이 기사는 프랑스 정치인들이 고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가들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는 기업에게는 처벌 차원에서 그들의 실업분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좌파 전선(Front de Gauche)의 멜랑송(Jean-Luc Mélenchon)의 경우에는 보다 규제 중심적이다. 그는 간접고용과 계약직의 최대 한도 범위를 설정하자고 제안한다. 즉, 기업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10%로 제한선을 정하여 비정규직 계약 쿼터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유연화 문제에 있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후보는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주의운동(Modem)의 바이루(François Bayrou)이다. 그는 근로시간은 분야별 협정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정 근로시간의 종말을 제안하고 있다. 극우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 후보자는 지나친 자유주의적 공약에 대해 경

계한다. 그녀는 임금의 비례적 상승이 동반된다는 조건하에서 35시간 근로에 대한 재협상을 허용하자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노동유연화에 관한 후보자들의 조심성이 이 주제가 지닌 사회적인 민감성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이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실업보험 기금이다. 올해 43억 유로(한화 약 6조 5,6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예정인데다, 사용자 측에서는 실업보상금 인하를 원하고 있고, 대중운동연합(현재 여당) 역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 출처: Le monde, 2012년 4월 2일자, 'La flexibilité du travail, sujet fantôme de la campagne électorale'



아시아

일본 : 비정규직 고용비율 35.2%로 상승, 1년 이상 실업자 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

일본 총무성이 20일에 발표한 2011년 노동력조사(상세집계, 평균)에 따르면, 고용자 중 아르바이트와 파견 등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완전실업자 수도 109만 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1년 노동력조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3개 현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수치도 비교를 위해 3개 현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임원을 제외)는 전년 대비 23만 명 증가한 4,918만 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1,733만 명으로 48만 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3,185만 명으로 25만 명 감소하였다.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은 파트타임근로자 및 아르바이트가 33만 명 증가한 1,181만 명, 파견사원이 27만 명 증가한 3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사원의 채용을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자 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완전실업자 수는 284만 명으로 33만 명 감소하였다. 단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0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 명 감소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는 리먼쇼크 이후 급증하였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실업자의 장기체류가 심각한 상황이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년 2월 21일자 조간 5페이지, ‘非正規雇用35%に上昇、11年、「失業1年以上」も高水準=訂正あり’

일본 : 청년층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 후생노동성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지침안 제출

후생노동성은 24일 비정규 고용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향후 정책지침안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에 제출하였다. 지침안은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정부와 기업에 의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침안은 비정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확보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정사원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비정

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에 지침을 정리할 방침이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년 2월 25일 조간 5페이지, ‘若者雇用の支援強化、厚労省、処遇改善へ指針案’

## 일본 : 남편의 가사·육아시간 길수록 둘째 이후 자녀 출생률 높아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남녀의 결혼, 출산, 취업 등의 실태 및 의식변화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저출산 대책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21세기 성년자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21일 발표된 제9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육아시간이 긴 부부의 둘째 이후 자녀 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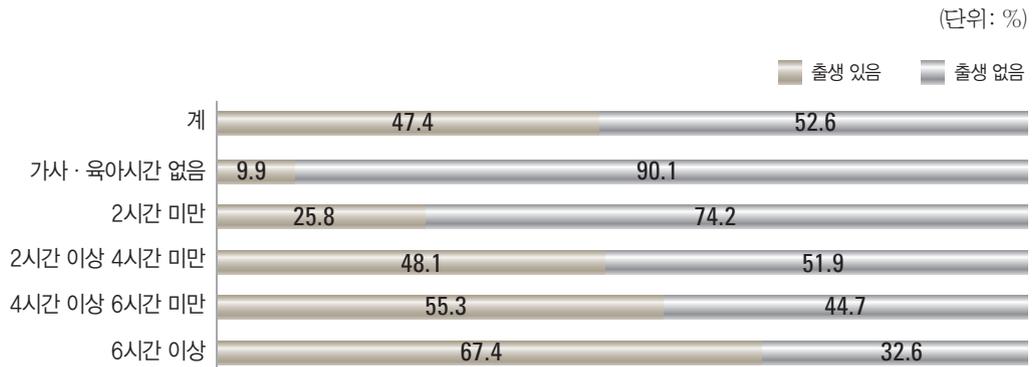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제8차 조사 시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시간별로 과거 8년간 둘째 자녀 이후의 출생률을 보면, ‘가사·육아시간 없음’ 9.9%, ‘2시간 미만’ 25.8%, ‘2시간 이

상 4시간 미만’ 48.1%,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5.3%, 그리고 ‘6시간 이상’ 67.4%였다.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시간이 길면 길수록 둘째 이후의 자녀 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가사·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2년 3월 21일자, ‘第9回21世紀成年者縦断調査’

[그림]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 시간별 둘째 이후 자녀 출생률(과거 8년간)





## 일본 :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본 국회는 3월 28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회사는 파견요금과 파견근로자 임금과의 차액(마진율) 평균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유리한 파견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파견근로자의 처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시 되어 왔던 부당한 임금의 공제 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둘째, 30일 이내 단기간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간 30일 이내의 단기 파견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다.

셋째, 파견회사가 특정 기업 그룹 내에 파견근로자의 80% 이상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넷째, 불법·위법파견인 경우 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법 개정 3년 후에 시행하게 된다.

이상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1999년 전 업종 파견의 원칙적 허용(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파견근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파견근로 규제강화가 2008년 이후 큰 이슈가 되었다. 2009년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은 2010년 3월,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수상의 교체, 참의원 과반수 미달,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는 당초 민주당의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제조업 파견금지, 등록형 파견금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노동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출처: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 2012년 3월 28일자, ‘労働者派遣法改正案、国会通過’

## 일본 : 31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법정고용률 2% 미달성

후생노동성이 지난 31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31개 도도현(광역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장애인 법정고용률(2011년 12월 시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이 중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채용계획 준하여 장애인을 적정하게 고

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비율(법정고용률)은 고용자 전체의 2%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31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이바라키현(1.42%)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가고시마현(1.45%), 야마나시

현(1.46%) 순이었다.

2008년 6월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토,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를 제외한 43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고용률이 2%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들 43개 교육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채용계획을 작성하는 등 법정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12개 현

만이 법정고용률을 달성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교육위원회는 계획의 50% 미만을 고용하거나 고용률이 전년을 밑돌아 권고대상이 되었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년 3월 31일자 석간 8페이지, ‘31都道府県の教委、障害者雇用未達、2%下回る’

## 중국 : 베이징, 최저생활보장금의 기준 재산현황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

베이징시는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소득을 숨기거나 속여서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정경제상황 심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확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재산현황을 확정기준에 포함시켜 현재 가정소득을 참고기준으로 하는 현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시에 고가소비품, 소득을 감추거나 최저생활보장 기재사항을 위조하여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의 확정기준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저생활보장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제공되도록 건의했고, 베이징시 민정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민정국에 따르면, 그간 베이징시 공공

부조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복지의존성이 높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치 않으며, 구직 행동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 최저생활보장 인정기준은 재산현황을 참고

이에 따라, 베이징시 민정국에서는 현재 베이징시 주민의 가정소득 및 재산 인정방안에 착수하였다. 그중 중점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인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현재 가정소득을 최저생활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는 현황을 조정하는 것이며, 신청한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정기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가 소비품을 소지하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최저생활보장 기재사항을 위조하여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방안 중에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베이징시는 점차적으로 주민 가정소득인



정 장기효율연동시스템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련부서에서 공공부조 대상자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해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징시 주민 가정 경제상황 심사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각종 공공부조제도의 동태 감독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1년 베이징시 민정국은 이미 인사국, 건설위원회, 공안국, 산업재해국, 공직급센터, 토지세 등 관련 부서들과 손잡고 베이징시의 24만 호에 이르는 공공부조 대상자 가정의 소득, 주택, 차량 등 재산·소득상황에 대해 상세한 심사를 진행했고, 부적

합한 가정에 한해 최저생활보장 자격을 취소했다.

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베이징시 민정국은 최저생활 대우 실업자의 기능이 단편적이고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촉진정책과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의 취업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대폭으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에 적합한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취업이 곤란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 新华网, 2012년 1월 25일자, ‘北京低保认定标准拟调整 将与财产状况挂钩’

### 중국 : 농업부, 직업농민 500만 명 중점 양성 계획

중국 농촌노동력의 유실과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농업부는 “2012년에는 중점적으로 500만 명의 직업 농민을 양성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 수는 총 2억 3,000만 명에 이르며,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머물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수는 총 2억 7,900만 명에 이른다. 농민공 가운데 대다수가 젊은 청년 근로자이다. 이러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농촌에서 유출되면서 농업종사자의 수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2012년 2월 6일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발표회에서 농업부 과학교육국 국장은 현재 농촌에 머무르는 대다수 농민은 부녀자와 나이가 많은 노인층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 농민의 평균 연령은 55세 이상이고, 젊고 지식수준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청년 농민은 도시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출처: 和讯新闻, 2012년 2월 6일자, ‘农业部官员: 今年将重点培训500万职业农民’

## 중국 : 양로보험의 성(省)급 통주의 기본적 실현

2012년 3월 7일,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중국에서 양로보험의 성(省)급 통주(통합기금관리제)가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성(省)급 통주 방식을 제정하였지만, “제도가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3월 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뉴스브리핑에서 사회보험 통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양로(연금), 의료, 공상(산재), 실업, 생육(출산)보험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도시와 농촌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통주 증차에 대한 법률 규정은 명확하다. 즉, 도시 직공의 양로보험은 기초양로금의 전국 통주를 실시하는 반면, 기타 사회보험제도는 성급 통주를 실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관련 부처는 최근 3년 동안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현재 중국에서는 이

미 27개 지역에서 성급 통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급 통주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직공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이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중 주요 문제점은 바로 중국 국민 모두가 “중국이 광활하고, 지역 간의 경제사회발전이 불균형적이며,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납부료와 비율로 산출하는 납부방식과 지불방식에 지역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지역 간의 이익관계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은 앞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큰 지역들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보험 관계의 지속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출처: 新京报网, 2012년 3월 7일자, ‘尹蔚民:养老保险的省级统筹现在基本实现’



## 중국 : 인사부 부장, 양로금 고갈 부인

지난 3월 7일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미디어 데이에서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양로금 투자운용 방향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운용방법은 아직 검토 중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로금의 고갈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인웨이민 부장은 사회보험법(社会保險法)의 규정에 따라 양로금은 가치를 보존하고 증식시키는데 투자할 수 있으며, 국가의 ‘12차 5개년’ 계획요강에도 양로금에 대한 투자운용, 가치의 보존 및 증식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로금의 투자운용방법은 안전제일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웨이민 부장은 중국 사회보험기금관리이사회(人社部)의 양로기금은 정부가 지출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보험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한 돈이고, 주로 현수현부(現收現付(pay-as-you-go system), 현 세대 노동인구로부터 걷은 금액으로 퇴직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부는 적립되기 때문에 투자운용을 어떻게 하든 당기에 지급을 보장해야 하고, 기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여,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한 후 적당한 시기에 건의방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후샤오이(胡晓义) 부부장은 양로금 투자운용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사회보험기금관리이사회에 계속해서 운용을 위탁하고, 개인 납부 이전부분은 관련 성(省)에서 투자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인웨이민 부장은 지난해 양로보험금의 수입은 약 1억 3천만 위안(한화 약 252억 원), 지출은 약 1억 2천만 위안(한화 약 232억 원)으로 약간 흑자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근로자 양로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약 1,800여 억 위안(한화 약 35조 원)으로만 약 재정보조를 제외한다면, 13개 성(省)의 기금이 고갈되었지만, 재정보조를 더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고 소개했다.

후샤오이 부부장은 중국의 도시지역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제도는 사회통합관리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방식을 실행하고 있고, 현재 13개 성은 양로보험금 개인계좌의 시범사업을 시험을 부분적으로 실제로 전개했으며, 이미 개인계좌에 적립된 자금이 2,700여억 위안(한화 약 52조 원)에 이른다면 향후 양로보험금 개인계좌 사업을 진일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新京報, 2012년 3월 8일자, ‘人社部部长否认养老金存缺口’